

우석균 칼럼
한미FTA 반대 운동의 방향
크리스 하먼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멕시코 민중 투쟁

5면
7면
8면



중동의 위기와
반전 운동

1, 2, 4, 5면

6자회담 9·19 공동성명 1년

3면

동북공정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3면

12호 2006년 9월 16일

국제적 관점 | 분명한 주장 | 회피하지 않는 자세
<http://www.counterfire.or.kr>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맞불

값 600원

권영길 의원이 자이툰 철군을 요구하다 “이라크 파병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인터뷰

지난해 말 열우당 의원들은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라고 했지만, 현재 열우당 정부는 12월 파병할 병력을 모집하며 파병 재연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라크 파병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라크에 파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에 파병하면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것이고 파병 안 하면 한미동맹이 훼손되거나 와해되는 것이라면 그 한미동맹이라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한미동맹 아닙니까?

모든 나라가 철군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 안에서도 철군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공론화하지 않고 파병 연장을 이미 정해진 사실로 만들어 놓고 지원병을 모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는 정부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는 거수기임을 이번에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 거의 다수가 정부의 결정이므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라크 파병의 본질을 깨닫고 국회가 국회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 의원님이 주도해 9월 국회에서 자이툰

철군안을 낼 준비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금뿐 아니라 [처음부터] 파병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철군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롭게 정리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반대했느냐? 시작부터 잘못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서 국제 테러와 연계하려 한다, 그래서 대량살상 무기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을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침공하고 보니까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 당국의 조작이었다는 것이 판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북핵 문제가 우리의 최대 과제가 아니냐, 북핵 문제를 풀려면 미국의 비

위를 맞춰야 한다.’

그런데 북핵 문제는 전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핵, 전략적 유연성, 평택기지 확장, 용산기지 이전 비용 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부 미국의 요구에 다 따라간 것이거든요.

부시의 북한 압박 때문에 북핵 문제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얻은 것이 뭡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명분이 민주주의 확립인데 이라크에 민주주의가 확립돼 있습니까?

그런데도 정부가 또 파병 연장하려는 것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는 의미를 담아서 철군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 2면으로 이어짐



이라크 점령 종식/ 한국군 레바논 파병 반대/ 이란 공격 반대/ 평택 미군 기지 확장 반대

9.23

자이툰 연내 완전 철군을 위한
반전행동

9월 23일(토) 오후 3시 / 서울역 광장/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www.antiwar.or.kr



1면에서 이어짐

최근 <한겨레21>의 보도 등에서 자이툰 부대의 실상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에서 어떤 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이미 제가 자이툰 부대의 실상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알려진 것과 달리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 지역에서 평화재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이툰 부대 안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장병들이 극도의 노이로제 증상에 빠져 있었고, 넷째 병사들이 사실상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제대한 장병들에게서 입수한 것인데, 이것이 그 때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1년 전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1년 동안 더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상설 파병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이 지금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바꾸려 하고 있고, ‘국제 평화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며 상설 파병군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군국주의화, 우경화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설 파병군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한 원칙과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느닷없이 상설 파병군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도 ‘국제 평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필요한 선결적 지원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도국 원조, 경제 원조를 증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로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전혀 없이 군대로만 국제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9월 23일에는 이라크 점령과 레바논 파병 반대, 이란 공격 반대, 자이툰 철군을 위한 반전집회가 열립니다. 이런 반전 운동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원내 활동을 결합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민주노동당 사업으로 9·23집회에 총력 결합하자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당의 핵심 사업입니다. 당원들이 주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9월 23일 이후에도 용산기지 이전,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청문회도 개최할 생각입니다. 이런 청문회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평화를 만드는 활동상을 알려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 정리 한규한

이라크는 내전 중인가?

이라크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마치 상식처럼 돼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라크인의 다수가 견잡을 수 없는 종파 간 반목에 빠져 든 것처럼 묘사하는 주류 언론들의 보도는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중동과 이라크의 위기에 대해 매우 훌륭한 기사를 써 온 <프레시안>의 이승선 기자조차 9월 1일 발표된 미국 국방부의 ‘이라크 치안 평가 보고서’를 언급하며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했다.

“이라크의 진짜 문제는 더 이상 미국과 이라크 정부가 알 카에다 또는 바티스트[바트당] 반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 내의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싸움, 즉 내전임을 보여 준다.”(<프레시안> 9월 7일치)

이라크에서 종파간 폭력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인 듯하다. 그러나 이것이 곧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의 주요 양상이 외국군의 점령에 대한 저항에서 이라크 내 종파 간 반목으로 바뀌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교전

게다가 종파 간 폭력조차 근본으로는 제국주의 점령 정책에 의해 부추겨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먼저, 이승선 기자가 언급한 미 국방부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공격 행위의 60퍼센트 이상은 미군과 미군이 지휘·통제하는 이라크 보안군을 겨냥하고 있다.(아쉽게도 이승선 기자는 이 점을 언급하지 않는다.)

반면,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은 15퍼센트에 불과하다.(다만, 중무장한 미군에 대한 공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전문가인 마이클 슈워츠 교수에 따르면, 지난 몇 달 동안 주류 언론들의 보도가 압도적으로 종파간 충돌에 집중돼 있을 때도, 미군과 저항세력 간의 교전은 하루 약 70건에서 9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최근 미시간 대학교가 이라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라크인의 91.7퍼센트가 점령군 주둔에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쿠르드족의 다수(63.3퍼센트)도 점령에

반대한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 들어 대체로 수니파 지역에 한정돼 있던 빈번한 점령 세력의 공세는 시아파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 전까지 시아파 지역은 미군의 주기적인 군사 공격에서 대체로 벗어나 있었다.

알 사드르

이것은 시아파 대중이 점령을 용인해 서가 아니라 2004년 4월과 8월 각각 팔루자와 나자프에서 시아파와 수니파가 점령에 맞서 함께 반란에 나선 뒤 미국이 저항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 시아파(특히 시스타니)가 요구한 조기 총선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시아파 지역에 사실상 광범한 자치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후퇴’했기 때문이었다. 그 덕분에 미군은 수니파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할 수 있었다.

헤즈볼라 지지 행진을 하는 알 사드르의 마흐디군

그러나 시아파가 주도하는 지방정부들과 이란 사이의 경제적·종교적·군사적 유대에 대한 부시 정부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그리고 강경파 반미 성직자인 무크타다 알 사드르가 이끄는 운동의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끝나고 있다.

상당수 이라크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이라크 남부 디와니야 주에서 미군이 지원하는 정부군과 사드르의 마흐디 민병대 사이에 벌어진 전투는 바그다드 사드르시티(사드르와 마흐디 민병대의 핵심 근거지)에서의 “결전”을 위한 “예행연습”이었다.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과 충돌의 주된 분단선은 여전히 점령 세력(및 부역 세력)과 그에 저항하는 세력 사이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은 오직 그 원천인 제국주의 점령 자체가 끝날 때만 해결될 수 있다.

김용민

〈맛볼〉창간을 축하하며

“세계 정세 이해를 돕는 〈맛볼〉이 되기를”

전에는 남의 일로만 여겨졌을 국제 문제를 우리 문제처럼 관심을 갖고 운동까지 하게 되는 일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맛볼〉이 우리 주변의 세계 정세를 울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구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구체적이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시안〉박인규 대표



동북공정

중국의 동아시아 제패 프로젝트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은 제국주의 세계질서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점에서 내가 2004년 <다함께> 36호와 38호에서 동북공정을 중국의 ‘내부 통합 용’으로만 파악한 것은 다소 협소했다.

물론 동북공정은 1990년대부터 강화된 ‘현대 중화민족 재창출’이라는 내부 통합 프로젝트의 일부다. 중국은 1991년 옛 소련의 해체가 소수민족 분리 운동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중국은 고대사를 다시 써 신장 위구르족, 몽고족, 티벳족 등에 대한 ‘동화’ 정책을 합리화했다. 또, 개혁·개방 이후 첨예해지는 계급 갈등을 ‘중화 민족주의’로 대처하려 했다.

그러나 동북공정이 ‘내부 통합’을 넘어 최근의 제국주의 질서 재편에 대한 중국 식 대응이라는 점도 볼 필요가 있다.

2001년 9·11 이후 미국이 벌인 “테러와의 전쟁”은 각 열강들 사이의 긴장을 심화시켰다. 열강들은 때론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에 편승해서, 때론 그것을 견제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역 패권을 추구하려 한다. 러시아는 체첸 공격을 강화했고, 중국도 자국내 이슬람 소수민족에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동시에, 상하이협력기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증대하려 한다.

동북아시아에서도 제국주의 국가 간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비호하에 강화되는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패권 강화 노력을 배가하

9월 6일 시작된 선양군구 소속 중국군 훈련 - 한반도 '유사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 하는 압력이다. 대만은 태풍의 눈이 되고 있고 북한도 이런 경쟁의 제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내부 변동에 대한 군사 개입 태세를 갖췄다. 일본의 ‘유사법제’는 북한의 변동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유사법제

한미동맹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달 13일 노무현은 “북한 위기사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제쳐놓고 북한 문제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점에서, 작

년 한국 정부가 미국의 ‘개념5029’ 계획에 합의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개념5029’는 북한 내부 소요사태,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 사태 등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다.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중국도 북한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당장은 동북아시아에서 ‘현상유지’를 원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유사 상황’이 올 경우 직접 개입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대북특사를 지낸 찰스 프리처드는 “북한이 붕괴할

때 중국으로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소 단정적으로 중국의 개입을 전망하기도 했다(<서울신문> 9월 8일치).

중국은 북한에 개입하기 위한 군사적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북·중 국경 경비를 경찰에서 정규군으로 바꿨다. 홍콩 경제지 <신보>의 보도대로라면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하는 시나리오는 오래 전에 작성됐으며 실제로 여러 차례 도상연습까지 마”쳤다.

또, 지난 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고로 중국군 선양군구 병력 2천여 명을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 추가 증원했고, 7월 25일 북·중 국경지대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게다가 미국이 제안한 ‘세계 핵테러리즘방지구상(GICNT)’에 참여할 뜻을 밝혀, 북핵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 놓으려 한다.

동북공정의 고대사 왜곡 — 한강 이북이 자신의 역사적 영토였다는 주장 등 — 은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급격한 변동에 개입하기 위한 중국 식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즉, “중국은 북한의 예상되는 돌발사태의 경우 한반도 북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 영토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이었던 고구려의 영토로 당연히 중국의 개입 사안이 된다는 주장”이다.(조민, 2004년 ‘통일연구원 연구진 발표’)

한규한

9·19 공동성명 1년을 돌아보며

1년 전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9·19 성명에 엄청난 기대를 걸었다. 한반도 위기 해소의 실마리에 접근한 듯한 낙관이 지배적이었다.

진보진영의 분위기도 못지 않았다. 9·19 성명이 북한 외교의 승리이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파산”을 의미한다는 얘기를 좌파 민족주의 경향의 핵심 활동가 동지들한테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한반도 전쟁 위기설은 한동안 쏙 들어가고 “한반도 평화구조 확립”에 대한 낙관이 퍼졌다.

1년이 지난 지금, 그것이 얼마나 단견이었는가를 깨닫기는 어렵지 않다. 한반도 긴장은 해소되기는커녕 완화되지도 못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 강행에 이어 지하핵실험 준비설마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사태를 이렇게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미국은 문자 그대로 성명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것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해 놓고는, 바로 그 회담의 종료 발언에서 케도(경수로 건설을 위해 구성된 국제 컨소시엄)를 해체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공동성명 채택 후에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합법적 거래, 불법적 거래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이뤄졌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9·19 공동성명이 낙관적 전망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은 미국의 탓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 실현의 방법 모색이라는 차원에서는 6자회담 참가국의 합의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대안인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6자회담(공동성명)을 해결책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십중팔구 6자회담 재개와 공동성명 이행, 그리고 남한 정부의 주도적 구실을 촉구한다. 하지만 6자가 다시 만나 공동성명을 다시 채택할들 이번에는 미국이 그것을 이행할까? 미국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지 않으리라는 예견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을까?

빛나간 전망

얼마 전 절필을 선언한 리영희 선생은 9·19 성명 직후 열린 강연에서 미국이 조약을 지킨 일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라크의 베트남화” 때문에 “미국의 전쟁 애호 집단이 북경회담에서 이루어진 방향으로 동북아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공동성명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것이다.

“미국이 조약을 단 한 번도 지킨 사례가 없으므로 이 사실로부터 출발해 한반도와

크리스토퍼 힐과 콘돌리자 라이스 - 9·19 공동성명을 몇 시간 만에 휴지조각으로 만든 장본인들

동북아 지역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단서를 잡아야 한다.” “북경회담 합의문이라는 종이조각을 토대로 해서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 리영희 선생은 “6자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광장히 문제 해결에 접근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데 비해나는 오히려 걱정과 불안이 생[긴다]”고 했다. “동북아시아 지배권 다툼을 위한 미일 군사동맹과 중국과의 전쟁 위기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리영희 선생의 정확한 예견은 어느 정도는 국제정세로부터 한반도를 조망하는 이 점에서 나온 것인 듯하다. 사실, 냉전 해체

이후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미국의 대응을 이해하지 않고는 소위 “북한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은 냉전 해체 뒤에도 동북아의 패권을 잃지 않기를 원했고, 이를 위한 개입의 명분이 바로 북한이었다. 오늘날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기본은 인도를 자기편으로 만들고 일본과 중국을 적대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전략이 동북아의 불안정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세력 관계의 저변을 이해하면, 이 지역의 불안정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이 모여 앉아 이 지역의 평화를 도모하겠다는 것 자체가 앞뒤 안맞는 얘기임이 더 잘 보인다.

물론 긴장이 고조되는 것보다 대화와 협상이 낫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을 제공하리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진보진영 안에서는 한반도 전쟁 위기설과 6자회담 기대론이 몇 개월 단위로 갈라들곤 했다. 하지만 정작 부시 정부의 입장은 대북 군사 조치도, 협상도 택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동에 집중하고 있어 북한을 다룰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적 판도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전략과 위기를 제대로 읽는다면 근거 없는 낙관에도, 근거 없는 두려움에도 치우치지 않고, 미국의 패권 전략을 무너뜨릴 아킬레스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하영

9·19 공동성명 분석에 대해서는 당시 발행된 <다함께> 64호에 실린 “이라크 수렁에 빠진 부시의 불가피한 선택”을 보시오.

제국주의자들은 왜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는가

최근 ‘테러와의 전쟁’ 듀오 — 조지 부시와 토니 블레어 — 는 ‘이슬람 파시즘’과 ‘이슬람 극단주의’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입을 맞추고 있다. 이것에 맞서는 투쟁을 부시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 투쟁”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부시와 블레어의 주장에 대부분의 정치학자와 언론인들은 비웃고 있다. 국제전략연구센터의 다니엘 벤자민은 “지하드주의자들이 무슬리니나 다른 파시스트들이 발전시킨 파시스트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런 난리법석 뒤에 있는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테러와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부시의 주장은 이슬람 전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일부 이슬람 = 테러리즘 또는 파시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일부’라고 해도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에 그런 성격이 담겨 있다고 암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반적인 무슬림 혐오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

‘파시즘’

이것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대다수 인구가 무슬림인 지역에 새로운 제국주의 질서를 강요하려 할 때 취하는 논리다. 무슬림들을 후진적이고 불합리한 존재로 그려 살육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미국 지배자들의 일부가 이슬람을 파시즘과 처음 연결시킨 것이 1978~79년 이란 혁명 이후였던 것도 시사적이다.

둘째, 상당수 무슬림들이 거주하는 나라의 지배자들도 국내 통치용으로 이슬람 혐오를 활용하고 있다.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운동을 분열시키려는 것이다.

학교에서 하향 착용을 금지하고 무슬림 거주지 통제를 강화한 프랑스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국과 독일과 덴마크도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의 음모’를 적발했다고 나서고 있다. 이 나라들의 지배자들은 ‘왜, 어떤 사람들이 테러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됐을까’라

는 근본적 질문을 회피하면서, 그 원인을 인종차별이나 빈곤이 아니라 이슬람에 있다고 말한다.

결국 이슬람 혐오는 일차적으로 서방 제국주의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의제에 대한 반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 혐오가 단지 제국주의자들의 분열지배 전략인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제국주의 세력들이 중동에 한 세기 이상 개입한 결과 중동의 반제국주의 세력 중 일부는 자신의 종교적 신조를 반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술들로 변모시켰다. 최근의 예로 헤즈볼라나 하마스가 그런 경우다.

그들은 중동 반제국주의 운동의 상징이 됐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에게는 골칫거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슬람 전체를 반제국주의 세력으로 보는 것은 그 종교 전체를 파시즘으로 매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인 것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무슬림 중 일부가 자신의 급진적 의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슬람을 활용해 온 것은 사실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 후 중앙아시아에서, 1960년대 미국에서, 1978~79년 이란 혁명에서 일부 무슬림들은 이슬람과 급진 정치사상을 결합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슬람과 급진 사상을 결합시키려는 시도는 모순을 낳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무슬림 중 일부를 설득하기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개입이 없으면 그들은 보통 ‘이슬람 민족주의자’로 남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슬림과 다른 운동세력이 연대할 수 있고 연대해야만 하는 새로운 상황이 세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 이후 많은 무슬림들이 급진화됐고 이번 레바논 전쟁에서 헤즈볼라가 승리하자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

무슬림들과 함께 더 단단하고 커다란 운동을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 공세 앞에서 흔들릴지는 실천적으로 중요하다. 일례로 미국의 평화정의연합(UFPJ)은 레바논 전쟁 초기에 양비론적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효과적으로 운동을 조직할 수 없었다.

김용욱

한미FTA 3차 협상 결과

한미FTA 3차 협상 종료 직후, 한국측 수석대표 김종훈은 “핵심 쟁점에서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고, 미국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는 “한국측이 제시한 농업 분야의 양허 수준에 실망했다”고 했다.

9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본 반FTA 운동 진영 일각의 예측은 한국 정부가 받고 있는 반대 여론의 압력 정도와 국익을 둘러싼 한미 양국 지배계급들 간의 갈등 정도를 과소평가한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영문본 협상문만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등 고압적 요구를 여럿 제기했다.

실제로, 한국 협상단은 커다란 반대 압력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 “협상이 1차에서 3차까지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자·농민뿐 아니라 미국의 노동자·농민 사이에도 한미FTA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공감대가 퍼져나”갔다(프레이먼) 9월 11일치).

정부는 한미FTA 홍보에 38억 원이 넘는 돈을 썼다. 그럼에도 한미FTA 반대 여론을

제압하지 못했다. 찬성 여론이 앞선다는 언론의 보도들이 잇따랐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한미FTA에 대해 강한 의혹을 갖고 있다.

이런 거리 여론은 국회 안에도 반영됐다. 국회의원 23명이 한미FTA 위험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집권당 소속 13명의 의원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2개의 전술 목표”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한국 협상단은 미국과 “힘쓰기”를 해야 했다. 특히, 섬유와 농업 분야에서 그랬다. 섬유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체결로 한국이 이익을 볼 분야라고 집중 홍보했던 분야이고, 농업은 한미FTA 반대 정서가 가장 강한 분야 중 하나다.

물론 한미FTA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의제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정부는 한미FTA 찬성론자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반대론자들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2개의 전술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듯하다.

즉, “‘국내의 한미FTA 찬성론자들에게 개별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협상을 진척시킬 수 있으니 양국 간의 작은 갈등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한미FTA 반대론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수 없도록 협상을 여러 곳에서 여러 개로 분산시켜 주의 분산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프레이먼) 9월 11일치).

정부의 이런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운동이 다시 한 번 거대한 결집을 건설해야 한다. 7월 12일 반대 시위는 대중운동이 아날로 한미FTA 협상의 선로를 흔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보여 줬다.

이렇게 봤을 때, 민주노동당의 국민투표 전술은 시의적절하지 않다. 물론 “국회가 다수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의 민심을 반영할 의지

가 없을 때,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 주권 문제를, 최소한 한미FTA 체결에 대한 비준권을 국회에 허락해선 안 된다”는 심상정 의원의 지적은 옳다.

다만, 가을 대중 동원에 매진해야 하는 지금 시점에서 운동의 주의를 분산시킬 우려가 있다. 국민투표는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협상을 체결하고 “국민의 민심을 반영할 의지가 없”는 국회가 FTA 비준을 체결하려 할 때 그에 대적하는 전술로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지난해 프랑스의 유럽헌법 반대 운동 진영이 채택해 효과를 낸 전술이다.

지금은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반대 운동 진영은 “한미FTA 반대”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의 다른 구호들처럼 간단명료한 기치 — 일부 좌파들이 고집스럽게 운동에 요구하는 “노무현 퇴진”이나 “열우당 해체”는 불필요하게 운동을 협소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 아래 가을 동원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때다.

김인식



한미FTA 저지를 위한 미국 원정 시위대



우석균 칼럼

메스를 들이대며

의사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기업 세계화 반대 운동가

한미FTA 저지 운동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한미FTA 3차 협상이 일단락됐다. 양측 협상대표 웬디 커틀러와 김종훈은 올해 내로 마무리짓기에는 협상이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불평을 늘어놓으며 4차 협상 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별도로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무역촉진권한법(TPA)의 시한이 내년 7월 1일이고 올 가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이의 연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들의 불평은 괜한 호들갑이 아니다. FTA 반대 운동이 협상을 좌초시키지는 못하고 있으나 협상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점인 투자·서비스·금융 부문에서 양측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는 것은, 이견이 나온 ‘사소한’ 문제들은 정치적 일괄 타결을 통해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한미FTA 협상의 반환점에서 저들의 중간 평가는 이제까지 반대 운동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FTA 반대 운동쪽은 어떤가? 우리 쪽도 사정이 그리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3차 협상 때 보인 운동의 대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운동은 항상 부침이 있다. 하지만 점점할 부분이 있다.

우선 한미FTA를 한미FTA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2차 협상 전후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멕시코의 경제가 더 나빠졌고 사회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비판에 한국 정부는 NAFTA로 멕시코 경제가 성장했다는 설득력 없는 답을 내놓았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는 달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미FTA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멕시코는 FTA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와 동반된 내부 구조조정에 실패한 게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FTA만 해서는 안 되고 내부 구조조정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FTA에 뒤따르는 구조조정 전략이라는 것이다.

연쇄고리

FTA는 FTA만이 아니다. FTA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의 연쇄고리 중 하나다. 따라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들과 노사관계로드맵 등의 노동

탄압 조치를 포함한 전체를 봐야 한다. 한미 양국 정부는 FTA에서 “교육과 의료의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개방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한발 뺐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 부문의 시장화가 멈추었나? 한미FTA에서 영리병원 허용이 빠

지자 재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국내 기업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곧바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대학 구조조정을 비롯한 교육부문 구조조정도 FTA와 ‘별도로’ 진행중이다. 방송·

기간통신·금융·해운·항만·우체국·농협·법률·택배·농업 부문은 한미FTA를 통해, 교육·의료·전기·수도·가스·철도 등 다른 부문의 사유화와 시장화는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해 진행중이다.

물론 공공기업 영업에 대한 상업적 고려라는 지 투자에서 영업이익 침해 금지 등을 통해 FTA는 포괄적으로 공공부문 사유화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러한 FTA의 사유화 효과는 ‘자발적 구조조정’과 더불어, 그리고 이를 통해 완성된다.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운동이 한미FTA, 자발적 시장화 조치, 노사관계로드맵이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략의 연쇄사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동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연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가 없다. 물론 한미FTA가 이 연쇄사슬의 핵심고리임은 분명하다.

여기에 반전평화 운동도 더해야 한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보다 전시작통권 환수 때문에 공격당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전시작통권 환수가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는 운동의 약점 탓이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나 이라크 파병, 레바논 파병, 전시작통권 환수도 미군의 중동 침공과 이에 따른 전 세계적 군사 재배치의 일환이라는 점을 대중적으로 분명히 하지 못하면 한미FTA로 몰린 현 정부가 전시작통권 환수 뒤에 숨은 알갖은 상황을 막을 수 없다. 반전평화 운동과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결합 필요성은 이처럼 매우 현실적이다.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된 운동을 두고 절망하거나 낙관할 할 때가 아니다. 대중운동을 건설하려는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 이전에 의외로 그 활동의 중심을 옮기려는 여러 논의들, 예를 들어 국민투표 논의는 아직 때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시한을 정해 두고 그 때까지 대중운동의 조직을 끝내야 한다는 논의도 선부르다.

대안 논의도 마찬가지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는 한미FTA 효과의 하나로 유럽연합(EU)이나 중국·스위스 등과 FTA를 촉진하는 FTA 플랫폼의 효과를 지적한다. 한중FTA나 한EU FTA를 통해 한미FTA의 현실적 대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그 제안이 한미FTA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해도 우리 운동의 대안은 아니다.

유럽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그 성과를 거둘 때까지는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이제 그 운동은 우리가 보고 있듯이 거대한 대중운동을 통해 유럽헌법과 CPE 법안을 좌초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는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직은 작고 혼란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이 불꽃들을 거대한 맞불로 타오르게 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다. 아직 낙관하거나 절망할 때가,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전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의 일보전진

기아차에서 정규직 임단투가 끝난 후 비정규직 독자 파업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원·하청 사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고소·고발을 자행했고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을 해고하려 한다. 원직복직 투쟁 과정에서 김우용 동지가 사측 관리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지난 9월 6일 기아차 화성공장 본관 앞에서는 고소·고발,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김우용 동지 폭행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4백여 명의 비정규직과 50여 명의 정규직 노동자가 모여 사측의 탄압에 항의했다.

9월 7일에는 주간 6시간, 야간 4시간의 비정규직 독자 파업이 벌어져 화성 공장 전체가 멈췄다. 이런 투쟁과 8월 31일 사측을 놀라게 한 식당 파업의 결과로 사측은 사실상 식당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야 했다. 나아가 사측은 정규직 활동가 6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철회했고, 김우용 동지

의 원직복직 요구도 수용했다. 통쾌한 승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원직복직 합의와 함께 ‘향후 조합은 … 노동조합 동의 없는 개별적인 무분별한 라인 중단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이것은 현장 노동자들의 자주적 활동을 통제하려는 잘못된 합의이다.

이제 비정규직지회의 임단투 요구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원·하청 기업이 계속해서 교섭을 회피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더 큰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투쟁에 적극 연대하면서 ‘노동자는 하나’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장재형(기아차 노조 대의원/ 정규직)

노동자 수감자 사상 최대

8월 31일 현재 노무현 정권은 1백13명의 노동자를 수감하고 있다. 이는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 정권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구속노동자 가운데 1백 명이 비정규직·해고 노동자들이다.

노무현 정권은 특히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단체교섭을 통해 받아 온 전임비마저 “공갈·협박”에 의한 “갈취” 행위로 몰아, 지역 건설노조 간부들을 싸늘이 구속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올 들어 구속한 노동자 2백1명 가운데 1백17명이 건설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포항건설노조 투쟁 과정에서만 68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다.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개악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해 노동3권을 파괴하면서 수많은 노동자를 구속하고 있다.

유청하

대학 맑스주의 포럼 문의: 010-2752-2003

강탈국가 이스라엘 : 시온주의와 제국주의

단국대
9월 14일(목) 오후 6시
장소: 이부대 104호

연세대
9월 20일(수) 오후 6시 30분

성균관대
9월 27일(수) 오후 6시

이화여대
9월 28일(목) 오후 6시 30분

중동의 위기와 미국의 세계제패전략

서울 서부
9월 13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이화여대 포스코관 153호
참가비: 2천 원

서울 남부
9월 20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성공회대 새천년관 7208호
참가비: 2천 원

강원대
9월 14일(목) 오후 7시
장소: 인문대학 1호관 105호
문의: 011-9270-8327

동부지역 사회포럼

중동의 위기와 제국주의 - 해결책은 무엇인가?

9월 19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동부여성플라자(건대역 6번 출구)
참가비: 2천 원 문의: 018-330-4624

충남대
레바논 전쟁, 헤즈볼라 그리고 제국주의
9월 13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인문대
문의: 011-9821-3091

한양대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9월 13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자연대 B 114호

건국대
중동의 평화는 가능한가?
9월 20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문과대 303호

시립대
중동의 평화는 가능한가?
9월 21일(목) 오후 6시 30분

고려대
신자유주의 —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가?
9월 28일(목) 오후 6시 30분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정기 구독하십시오

짚 6개월 / 2만 원
(신문값 15,500원 + 우송료 4,500원)
짚 1년 / 4만 원
(신문값 31,000원 + 우송료 9,000원)
atgmail@nate.com
전화: 02-2271-2395
계좌 번호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영국의 혁명적 맑스주의자 크리스 하먼은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해결책도 상당히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이 글은 2003년 10월에 씌어졌다.

다음 달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사회포럼에서 한 가지 용어가 유행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다. 어떤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국제 자본주의 체제와 동의어로 사용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체제의 현재 국면(흔히 '세계화'라고 부르는)을 일컫는 말로 사용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각국 정부가 선택하는 특정한 경제정책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할 것이다.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업 세계화 반대 운동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체제와 동의어라면 혁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각국 정부의 특정 경제정책일 뿐이라면 온건한 개혁으로 족할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 아팍(ATTAC: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의 지도자인 베르나르 까쌍은 국제 금융거래에 대한 토빈세 과세만을 요구하는 반면, 주류 경제학계의 이단자들은 케인스주의 국가 개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중 선동이 아니라 여론 주도층의 생각 바꾸기에 의존한다.

사실, 신자유주의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정확히 말하면 신자유주의는 일종의 경제 이데올로기로, 자본주의 체제를 위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일련의 처방전을 각국 정부에 제공한다고 표방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1930년대 대공황 전까지 자본가들의 사고를 지배한 자유시장 즉 자유방임 이데올로기와 동의어였다. 그것은 국가 개입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것은 단 하나의 주요 자본주의 나라, 즉 영국의 상황에만 들어맞았다. 그것도 1840년대 말 곡물법이 폐지된 뒤 비교적 짧은 시기에만 들어맞았다.

영국 자본주의는 경쟁자들보다 일찍 공업화에 성공했고, 자유무역은 영국 자본주의가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계속 밀어낼 수 있는 수단이었다. 영국 자본주의가 국가 개입을 신뢰하지 않았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군사력을 사용했다. 대영제국 안에서 영국 기업인들은 다른 경쟁자들보다 확고한 우위를 누릴 수 있었

다. 그들은 자유시장 정책을 버리고 자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들과 제국주의적 강탈 정책에 의존했다.

영국 지배계급은 자신의 지배력이 위협받자 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국가 개입에 의존했다. 1913년 자유당 정부는 앵글로-페르시아 석유회사(영국 석유회사, 즉 BP의 전신)를 국유화했고, 1930년대에 보수당 정부는 주요 항공사들과 송전(送電)회사들을 국유화했다. 비록 여전히 자유방임이 공식 이데올로기였지만, 국가독점자본주의와 그 쌍둥이인 제국주의가 현실이었고 그것은 경제의 군사화에서 절정에 달했다.

이데올로기

제2차세계대전과 그 이후 진행된 군사화의 한 가지 결과가 일시적 완전고용이었다. 물론 자본주의 국가가 나서서 노동계급의 불만을 달랠 필요도 있었다. 전쟁이 한창일 때 보수당 정치인 쿤틴 호그(훗날의 해일섬 경)는 이렇게 썼다. “국민에게 개혁을 제공하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1940~50년대에 케인스주의 이론은 국가 개입에 집중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계획이 낡은 자유시장 자유주의를 대체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현실을 반영하는가 하면 또한 왜곡하기도 한다. 개량주의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본말을 전도시켜 완전고용과 복지혜택을 군사적 야만주의의 부산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선행 덕분이라고 보았다.

케인스주의의 막강국은 겨우 30년 동

안만 지속됐다. 1970년대에 군비 지출과 국가 개입으로도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위기 국면이 시작됐다. 국민국가들은 점차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자본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심지어 가장 야만적인 수단을 사용해도 그럴 수 없었다.

케인스주의 이데올로그들은 국가가 개입하면 자본주의가 모든 계급에게 이롭게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위기가 닥치자 난처해졌다. 그런 주장에 고무된 사람들이 위기의 폐해를 피하기 위해 훨씬 더 급진적인 조치들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 정부가 그런 조치들을 실행할 수 없다면 아마 노동자들이 직접 그런 메커니즘들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지배계급 이데올로그들은 낡은 자유시장 자유주의로 대거 복귀했다. 그리고 국가 개입 자체가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즉 '신' 자유주의는 문제의 진정한 원인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프로젝트였다.

국영 기업과 서비스를 해체하면 노동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 수 있었다. 노동자들이 위기에 처한 체제 하에서 자신들의 몫을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는 길은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놓고 다른 노동자들과 경쟁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낡은 국가 독점체들을 인수한 자본가들은 직접적인 물질적 혜택도 얻었다. 체제 전체의 위기 경향이 더 심해지더라도 사유화는 혈값 매각을 통해 특정 자본가 집단이 손쉽게 이익을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국제적으로, IMF·세계은행·WTO는 과거에 중소 규모 국가의 자본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메커니즘들을 확실히 해체시켜, 세계 최강의 기업들이 각국의 시장을 장악하고 기업체들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었다.

국가

'신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지 않는 동안에 변창한 방식들을 통해서 대안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주요 자본주의 강대국들은 나머지 세계의 자본가들에게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처방해 주었다. 그리고 흔히 그 결실을 마음껏 향유한 것은 바로 그 강대국들이었다.

물질적 이해관계, 즉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받는 축적 압력 때문에 자본들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가장 큰 자본들은 국가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비록 이데올로기와 맞지 않더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다른 자본들이나 다른 국가들에 맞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에서 싸워 줄 다른 세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시 정부 내에서 득세하는 집단은 자신들을 신자유주의자(네오콘)들이 아니라 신보수주의자들과 부른다. 왜냐하면 자유시장이라는 신자유주의 복음은 남들에게 강요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약탈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강 관세에 의존하고, 농업 보조금을 고수하고, 세계 2위의 석유 매장량을 차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라는 단순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신자유주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경우엔 신자유주의를 이용하는 거대한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교육'에서 대중 행동으로 나아갈 때면, 맑스의 말을 빌면, 주장의 힘이 힘의 주장으로 바뀔 때만 우리는 그들을 물러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멕시코의 9월 반란

멕시코시티의 운동을 현장에서 목격한 캐나다 사회주의자 이언 맥도널드가 멕시코의 정치 상황을 분석하고 전망한다

1990년대 내내 멕시코를 흔든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운동이나 투쟁도 국가적 차원에서 권력을 다룰 수 있는 광범한 정치 운동을 건설하지 못했다. 농촌의 무장 반란, 산업현장의 반란, 원주민 투쟁, 사유화 반대 투쟁, 학생 운동 등이 모두 지지부진해지고, 하찮거나 의미없는 양보를 얻어내고 가라앉았다.

좌파 정당인 민주혁명당(이하 PRD)은 이런 투쟁들이 성장하게 할 수 없었다. PRD는 1988년 대선에서 선거부정 때문에 승리를 빼앗기고도 이를 순순히 인정한 이후 여느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처럼 모순된 노선을 추구했다.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인 노동계급과 사회운동들에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려 애썼다.

지난 7월 2일 대선에서 PRD 후보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승리했다면 이런 흐름이 거의 변함없이 지속됐을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오브라도르는 미묘한 줄타기를 했다. 국내 정책에서는 중도좌파 공약들을 제시하면서도, 자신의 “대안적 국가 건설 프로젝트”가 신자유주의 정설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해외 언론과 국제 시장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멕시코 지배계급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오브라도르와 그의 기반인 노동계급과 농민을 두려워하고 혐오했다. 그래서 그들은 서투른 정치 개입을 하는 바람에 앞으로 한동안 멕시코에서 안정적인 신자유주의 정권이 집권할 가능성을 봉쇄해 버렸다.

사회 위기

지금 멕시코에서는 정치적 급진화와 사회적 급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8주 동안 정치 위기가 매우 급속하게 발전했다. 헌법 테두리 안의 합법성을 둘러싼 논쟁이 헌법의 정당성을 둘러싼 투쟁으로 변모했다. 사회적으로는, 선거 당시 “거시경제의 안정” 운운하던 PRD가 이제는 신자유주의를 비난하고 부의 재분배를 약속하고 있다.

오브라도르는 오는 9월 16일 멕시코시티의 소칼로 광장에서 전국민주주의대회를 열자고 호소했다. 멕시코 전역에서 선출한 거의 1백만 명의 대표들이 멕시코 헌법 39조에 따라 모든 정치적 권위를 민중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때문에 발생한 사회 위기가 없었다면 정치 위기가 그토록 급속하게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규모 집회·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왜 참가했느냐고 물을 때마다 그들은 선거 부정과 부(富)의 범죄적 분배를 다 얘기했다. 멕시코에는 세계 4위의 부자도 있지만, 노동계급의 절반 이상이 일주일에 12달러(약 1만 1천5백 원)

도 벌지 못한다.

운동을 끌고 갈 필요성 때문에 오브라도르의 정치가 꾸준히 바뀌었다. 8월 초에 그는 부자들이 멕시코를 강탈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자신이 신자유주의를 폐기하고 부를 재분배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농민단체들은 민주주의와 농촌 지원을 요구하며 그를 지지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지출 증대, 사유화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그를 지지한다. 노인들은 민주주의와 노인 연금을 요구하며 그를 지지한다. 여성단체들은 모성 보호와 시우다드 후아레스[멕시코 북부 도시]의 연쇄살인 사건에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운동에 동참했다. 원주민들도 9월 16일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그들의 지역 자치를 요구할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차별 금지 법제화를 요구할 것이다.

운동이나 지배계급 어느 쪽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9월 초에도 긴장은 계속 고조됐다. PRD 소속 의원들이 머지않아 오브라도르와 결별할 것이라던 근거없는 추측은 9월 1일에 사라졌다. 그 날 PRD 소속 의원들은 현 대통령 비센테 폭스의 연례 국회연설을 저지하기 위해 하원의 연단을 점거했다.

오브라도르는 시위대가 의사당으로 진격하면 국가가 이를 빌미 삼아 운동을 탄압할 것이므로 시위대가 소칼로 광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16일 대회를 계속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찰의 도발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집회가 열렸고, 사람들은 오브라도르의 주장에 동의했다. 시위진압 경찰이 진을 친 채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독자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운동의 규율을 잘 보여 주었다.

농성장에서는 수천 명이 TV 앞에 앉아 의사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았다. 폭스가 의사당에 도착한 지 겨우 7분 만에 그냥 돌아가야 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소칼로 광장으로 돌아가서 첫 승리를 자축했다. 그 날 밤에 농성장에서는 새로운 구호들이 등장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한다”, “폭스는 졌다, 펠리페 [이번에 부정선거로 ‘당선한’ 후보]도 질 것이다”,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 등등.

운동성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 9월 15일에 폭스는 다시 한 번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그 장소가 소칼로 광장이다. 16일에는 지금 농장이 있는 거리에서 멕시코 군대가 관례대로 행진할 것이다. 펠리페 칼데론은 12월 1일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할 것이다. 그런 각각의 행사에 대해 운동은 합헌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9월 16일 이후 멕시코에는 정치권력이 두 개가 존재할 것이다. 사유화를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말하는 특별히 우파적인 신자유주의 정부와 전국민주주의대회에서 선포할 모종의 좌파 정부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오브라도르는 칼데론과 협상은 물론 심지어 칼데론을 인정하는 것조차 거부해 왔다. PRD 지도자들과 국민행동당(PAN)의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는지는 분명치 않다. 오브라도르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아주 적다.

지금 우파의 전략은 운동이 제풀에 지칠 때까지 그저 기다리는 것인 듯하다.

운동은 지리적으로 불균등하고 멕시코 시티에 집중돼 있다. 남부의 오악사카 주(州)에서는 경제 파업이 정치 투쟁으로 발전했다. 멕시코 노동계급 가운데 가장 전투적인 부문에 속하는 교사들이 광범한 노동단체 연합을 구축하고 일부 지역에서 권력을 장악하기까지 했다. 현재 연방정부와 협상이 진행중이다. 인기가 땅에 떨어진 주지사는 숨어버렸다.

멕시코 전역에서 광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매우 전투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교사 파업이든 광부 파업이든 아직 멕시코시티의 운동과 제대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

이 점은 사파티스타도 마찬가지다. 대선 기간에 이른바 ‘다른 캠페인’을 진행하며 선거에 기권하는 듯한 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사파티스타는 이제 새로운 운동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 멕시코시티에 머물고 있는 마르코스는 아직 이 운동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과 접경 지대이며 대규모 공단이 있는 북부 여러 주의 노동자들도 아직 조용하다.

더 심각한 것은 조직 좌파가 아직 취약하다는 것이다. PRD는 더는 이 운동을 전진시킬 수 없을 것이다. 농성장에서는 조직화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좌파 재결집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멕시코의 현재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남미에서 일기 시작한 좌파 물결이 이제 북미까지 밀어닥쳤다는 것이다.